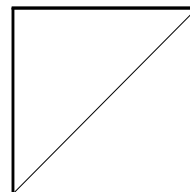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7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2. 16. (제 3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주식회사 재네트대부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2. 16.

## 1. 의결주문

주식회사 재네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주식회사 재네트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가. 총자산한도 위반

- ☐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총자산한도 범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재네트대부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조치를 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37차 제재심의위원회(2021.11.18.) 심의필
- 제3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2.2.10.) 심의필

<별지>

주식회사 재네트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□ 기관에 대한 조치

- 주식회사 재네트대부 : 2022. 2. 21.부터 2022. 5. 20.까지(3월) 영업 전부정지
  - 정지 업무 : 대부업(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) 관련 모든 영업행위 금지\*

\*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전부정지 기간에도 다음 업무는 허용

- 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금의 수령
- ②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 등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한연장금액이 대부잔액 이내로서 이자율이 종전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조건의 기한연장
- ③ 문자메시지 및 전화(내전)를 통한 단순정보(연체사실, 연체금액, 계좌번호, 담당자 소속, 성명 및 연락처) 안내
- ④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전 채무이행지체사실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의 통지
- ⑤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채무확인서 발급 등 제증명서 발급
- ⑥ 영업정지 전 채권추심을 위해 법적 절차를 착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추심업무
- ⑦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등 업무
- ⑧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업무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총자산한도 위반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,

주식회사 재네트대부는 2019.12.31.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 (11.9배)한 사실이 있음

#### 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, 제13조 제1항 및 제6항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, 제7조의4 제1항

## 관계 법규

### 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**제7조의3(총자산한도)**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** ①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,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

2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대부업자 등에 대한 주의·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·문책의 요구
2.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
3. 직원의 면직 요구

⑦ ~ ⑧ (생략)

<별표1>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(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)

11의2.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
**부칙 제7조(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4조의4(총자산한도)**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"란 10배를 말한다.

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「상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

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의4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)**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② (생략)

**<별표2>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(제7조의4 관련)**

1. 일반기준

가.~나. (생략)

다.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해당 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
거.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7호	영업 전부정지 6월	등록취소	-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**제17조(기관에 대한 제재)** ①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업의 인가·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, 영업·업무의 전부 정지

가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·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·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

나.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
다. ~ 라. (생략)

2. ~ 8. (생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가계금융과	여신금융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513	02-3145-8267